

 금융위원회		<b>보도설명자료</b>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일시	배포 시	배포일시	2023. 3. 9.(목)		
담당부서	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	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문	(02-2100-2612)

## 3.8일자 SBSBIZ 기사 “영끌족 청년 4,900명 724억 이자탕감” 과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.

### 1. 기사내용

- SBS biz는 3.8일 “영끌족 청년 4,900명 724억 이자탕감” 제하 기사에서 “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 받은 청년수가 5천명에 육박”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현재 금융회사, 신복위,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\*되고 있습니다.

\* (금융회사) 개인사업자119, (신복위) 신속채무조정,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, (법원) 개인회생, 파산 등

- 특히,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20%의 정상적인 금융거래(대출, 카드 발급 등)가 어려운 저신용, 연체(우려)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.

- 이는, 별도 지원없이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금년중에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% 저신용 청년에서 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,
- 기초생활수급자·고령자 등 **상환여력**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,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.

□ 이러한 지원방안들은 신복위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,

- 누구든지 **대출상환**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(우려)차주라면 실직, 생계, 학업, 투병,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,
-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,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\*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.

\*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·체결한 「신용회복지원협약」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

